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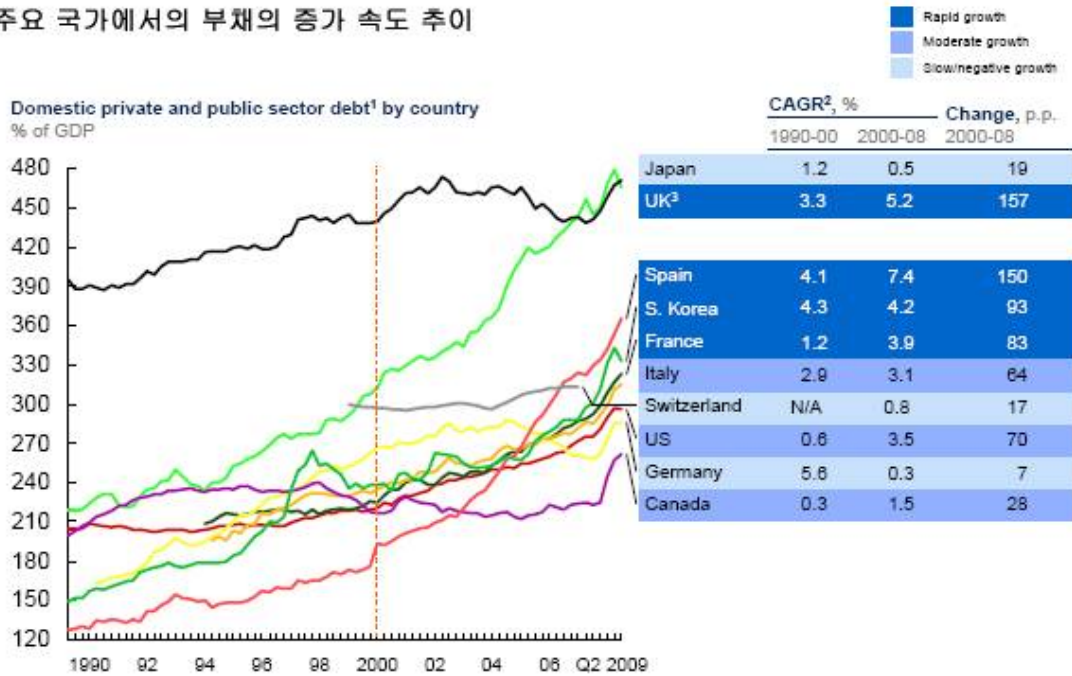
부채의 경제학-가계 부채가 한국경제를 좌초시킬 것인가.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bkkim21kr@naver.com)

1. 글로벌 부채축소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팽창과 함께 각 부문에서의 부채의 확대에 의한 거품형성에 의해 성장한 자본주의.
- 한국경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부채가 증가해왔던 국가의 하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국가 부채와 대기업 부채가 주요한 부채 부담이었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계 부채와 금융 부문 부채가 늘었음.)

주요 국가에서의 부채의 증가 속도 추이



1 "Debt" is defined as all credit market borrowing including loans and fixed-income securities.

2 Compound annual growth rate. Where data are unavailable, the longest possible period is used.

3 Even after removing foreign lending by UK banks, UK debt/GDP remains higher than every country except Japan.

SOURCE: Central banks; Haver Analytics; McKinsey Global Institute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채에 의한 성장 국면이 붕괴되고 전반적인 부채 축소 (de-leverage)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본격적인 부채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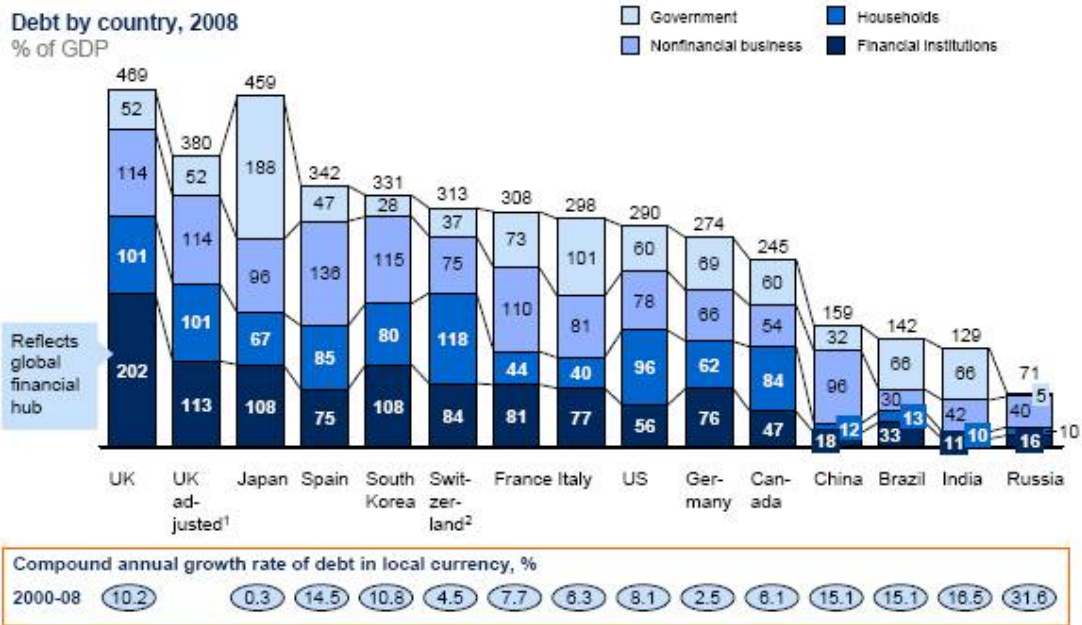
- 한국경제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가 331%로 매우 높은 부채부담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그 증가 속도 역시 가장 빠른 국가의 하나임.

- 최근 경제위기 탈출과정의 특징은,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금융 부문과 기업 부문 부채가 국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로 이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결국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 위험성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면서, 동시에 가계 부문의 부채 부담이 주요한 경제적 위험이 될 것이라는 것.

- 한국은행은 2010년 초 통화신용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요인> <외국 자본 유출입> <가계 부문 채무상황>을 우리나라의 올해 세 가지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한국은행,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0.1.7)

주요 국가에서의 각 영역별 부채 비율



1 The UK financial sector was adjusted to reflect its position as a financial hub. See the technical appendix for details.

2 Data for Switzerland represent year-end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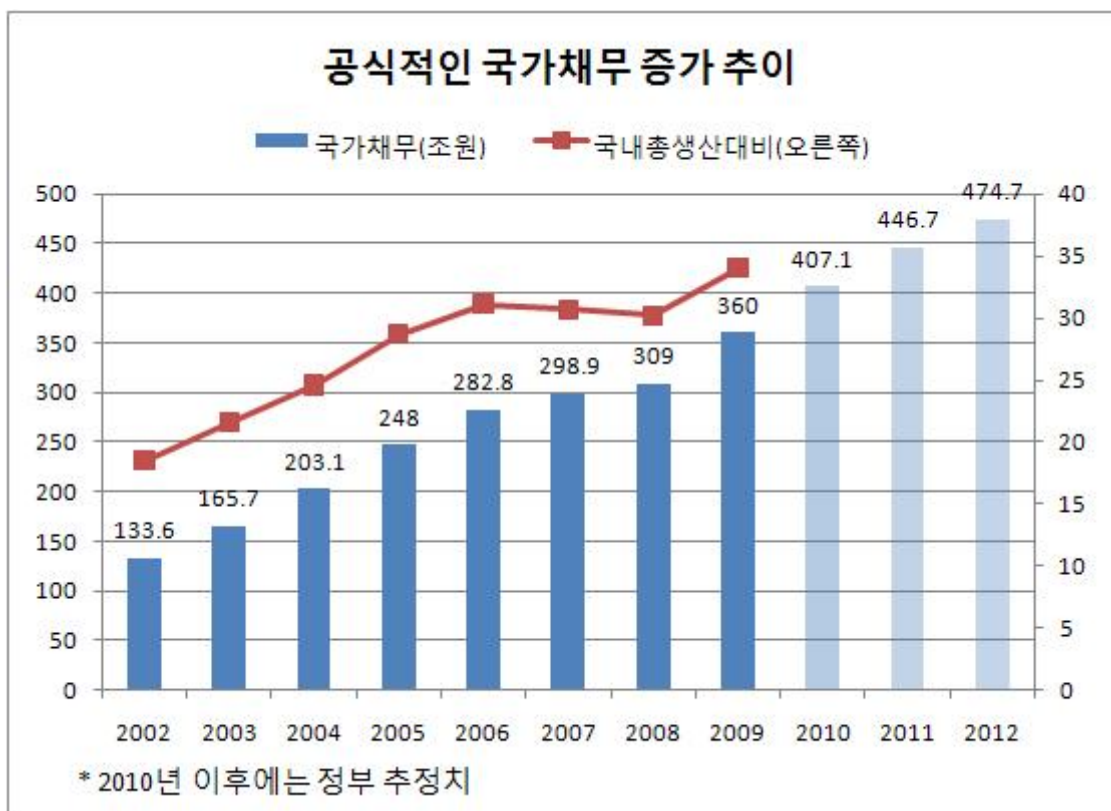
SOURCE: Haver Analytics; McKinsey Global Institute

2. 국가 부채 - 한번 누적되면 털어버리기 어렵다.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국내 총생산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임. 그러나 증가 속도로 보면 주요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절대 규모도 커지고 있어 2010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할 예정임.

- 특히 2009년 기준 국가채무로 측정된 366조원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된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 377조원을 더하면 가볍게 7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함.(2009년부터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은 수자원 공사에, 세종시는 토지주택공사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채를 함께 고려할 현실적 필요가 커지고 있음.)

- 국가부채가 2010년에 당장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이후 위험요인을 키우게 될 것이고, 향후 더블딥과 같은 또 다른 경제 충격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응력을 극히 떨어뜨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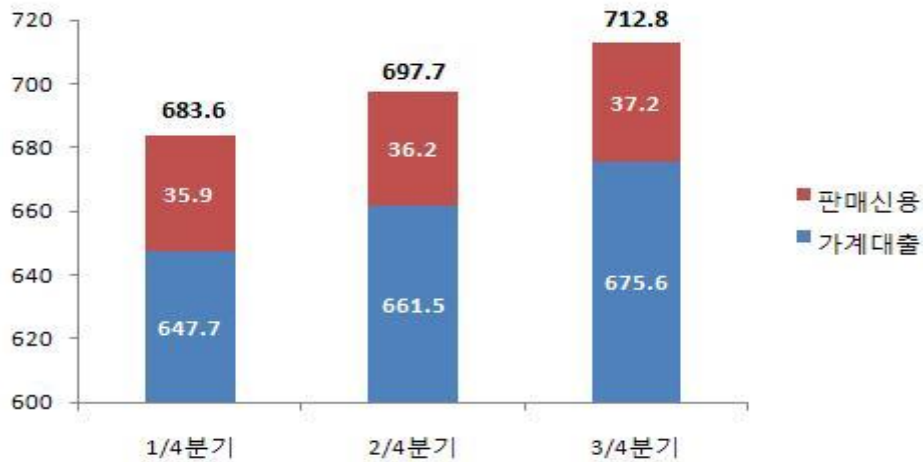


3.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실상

- 한국경제에서 2010년 부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이슈는 가계 부채 부담임. 2009년 3분기 까지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기고 있음.
-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로는 약 80%,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약 1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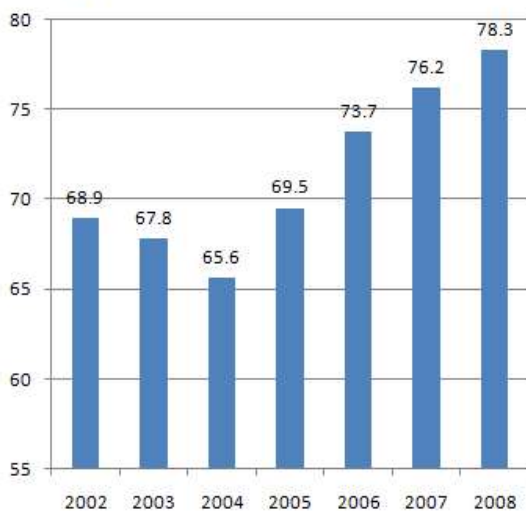
2009년 가계신용동향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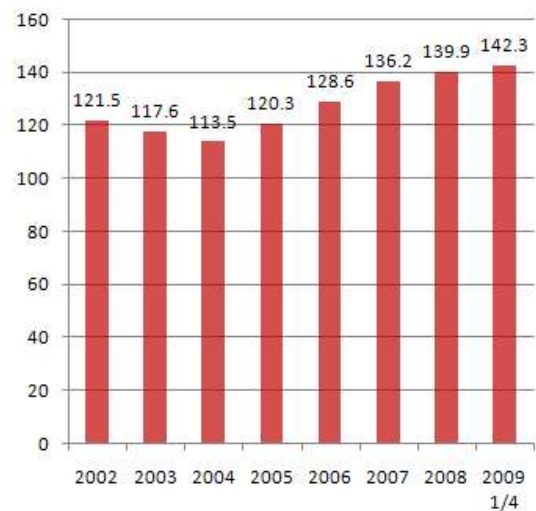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2009년 3/4분기 가계신용동향' 자료 사용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명목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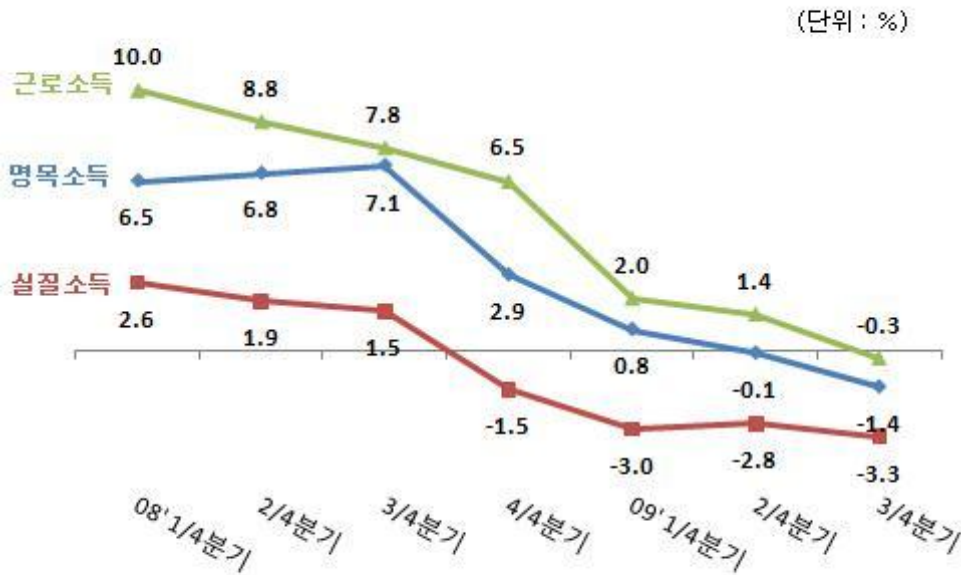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가처분소득



4. 가계 부채의 위험성 1 - 소득 불안정성 - 상환 능력 약화

- 가계 부채를 각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소득 대비 상환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임.
- 이미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9년 상반기에 140%를 넘고 있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폭발했던 당시의 136%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2010년에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고용이 안정된다는 징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임. 2010년에 물가상승률을 3%로 잡는다면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비용 상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분기별소득 증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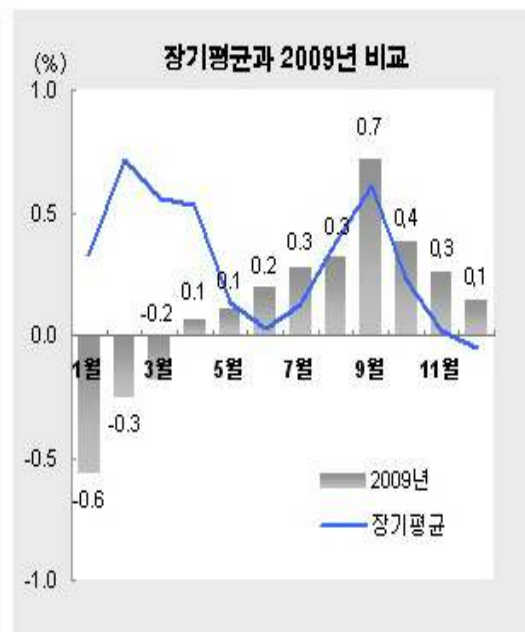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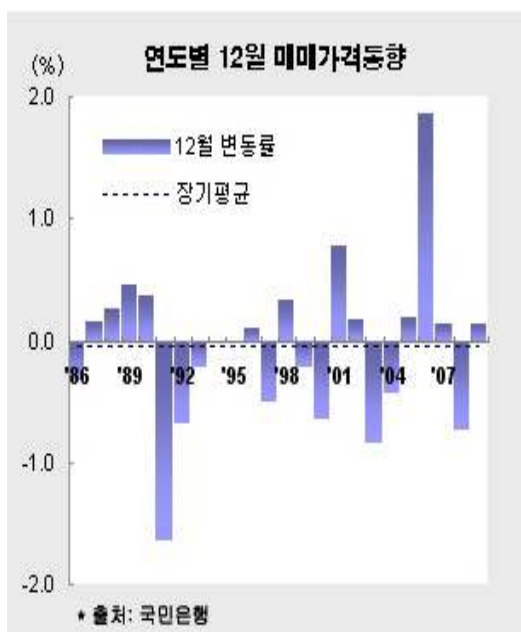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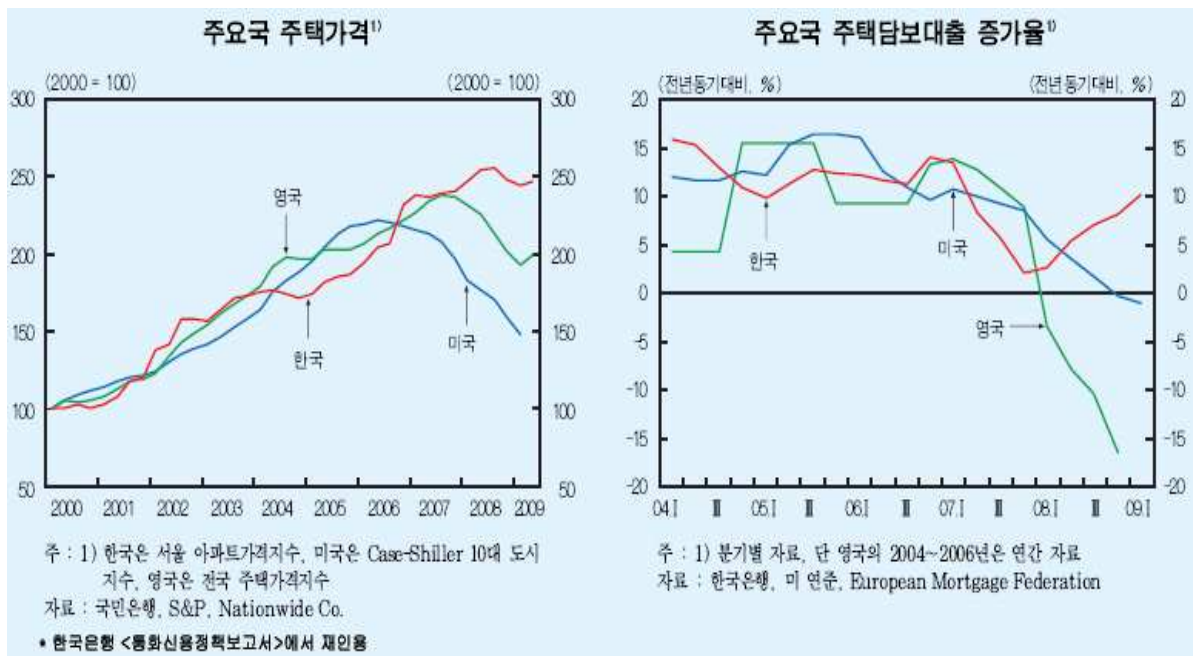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 출처 : 통계청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자료 사용

5. 가계 부채의 위험성 2 - 자산 가격의 불안정성

- 가계 부채에 대한 각 가정의 대응능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지표는 자산 가격에 대한 안정성임.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의 약 절반 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주택 가격 동향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주택 거품이 빠지고 있지도 않고 주택담보 대출이 줄어들고 있지도 않음.



6. 가계 부채의 위험성 3 - 은행 경영전략과의 충돌 / 금융자산의 불안정성

- 2010년 우리나라 각 은행들은 ‘소매 금융’ 중심으로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됨. 금융위기 와중에서 특별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공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특히 위험도를 감안하지 않는 금융상품 판매가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 금융자산 가운데 여전히 예금이 46%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험 및 연금 25.2%, 주식 15%, 기타 수익증권 등이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내용을 보면 시장 민감형 금융자산 구성이 높아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산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음.

<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보유 비중의 투자형태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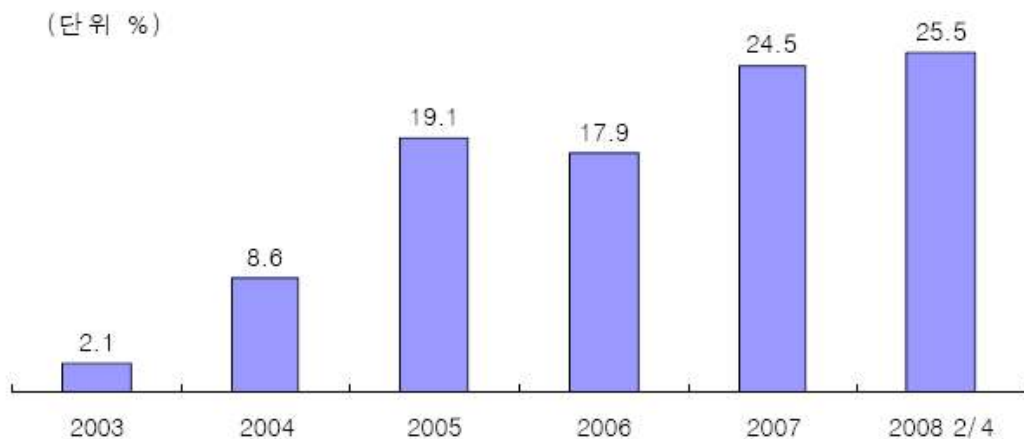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2003	16.9	11.4	10.9	4.4	8.4	2.4	7.5	4.8
2005	14.9	12.1	11.7	4.0	11.6	3.7	7.0	6.3
2007	12.0	14.2	7.4	5.5	11.3	5.0	21.2	9.8

자료 : FRB, 英 통계청, 일본은행, 한국은행, 자산운용협회 자료 재인용.

주 : 영국, 일본의 2007년 경우 3/4분기 자료임.

< 국내 생명보험 중 변액보험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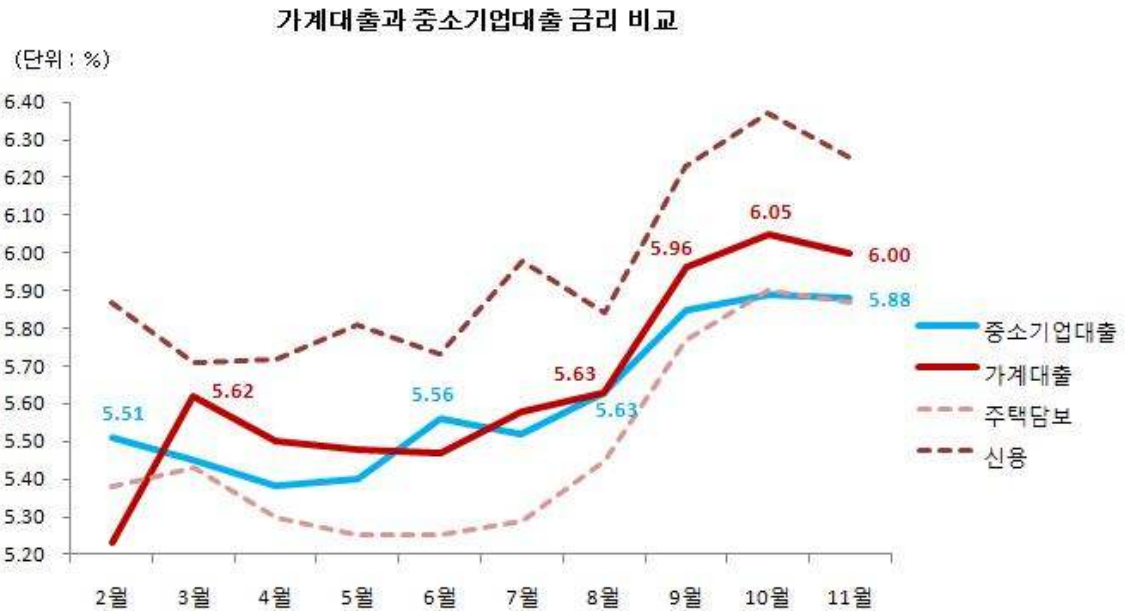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7. 가계 부채의 위험성 4 - 금리인상의 부담

- 시장에서는 2010년 기준 금리가 1.0~1.5%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곧바로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가계대출이 1사분기에는 6조 원, 2사분기에는 6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2010년 상반기 기준 12조원 부담.

- 정부 추정에 의하더라도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가 1퍼센트 올라가면 매월 현재의 가계 이자 부담이 1조 6000억 원에서 20퍼센트가 늘어난 2조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함.



* 기준금리가 2%로 결정되고 유지된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 변동 상황

* 주택담보와 신용은 가계대출 중 일부

8. 가계 부채 폭탄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

- 2010년 1월20일, 금융위원회 => 2010년 중 만기 도래하는 일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은 44조7000억 원, 2009년(43조3000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반면 분할 상환 방식은 22조3000억 원으로, 2009년(31조2000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 - 단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부담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임.
- 현재의 가계 부채를 소득과 비교하거나 또는 자산(금융자산 + 부동산 자산)과 비교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 소득이나 자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상황은 소득의 측면이나 자산 가격의 측면 모두 매우 불안정한 국면임.
- 가계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가계의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
- 은행의 대출 경쟁 재개로 인한 가계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일부 금리인상 부담을 흡수해야 함.(가산 금리의 점진적 축소)
- 경기변동과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의 확대는 금융 불안을 촉발시키고, 가계의 소비여력과 구매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정부와 은행이 가계 경제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가계경제는 물론, 금융회사와 기업, 국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탈출과 경제안정화는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임.